

“여성보호 위한 계획안 아니다”

94.2.14

여성·노동계 집단 반발, 공대위 결성 대응기로

노동부가 제시한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여성계와 노동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업종노조회의, 한국여성노동자회 등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 지난 20일 장충동 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공대위는 “노동부가 여성취업·연장근로제한, 휴일, 야간근로, 생리휴가 등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조항이 고용기

있지만 이는 잘못된 전제하에서 출발한 보호논의”라며 “노동부의 안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지 결코 모성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반박의 근거로 공대위는 유급생리휴가 폐지 대신 노동부가 제안하고 있는 산전산후 휴가 12주의 법제화 추진이 현 정권이 교체된 이후인 97년에야 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일정한 시간이 경

전·후휴가를 올해안에 폐지하게 될 유급생리휴가와 맞바꾸려는 것은 현 정부가 기본적으로 여성보호에 대한 의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례라는 것이다.

이날 공대위는 여성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모성보호 확대·남녀 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안을 제시했다. 근로자 파견법 제정 반대, 비정규직 고용 확대 규제 및 정책 수립, 고용보험법 적용대상 업체를 현행 100이 이상에서 5이 이상으로

여성고용의 할당제 등이다.

또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정책안으로는 무급생리휴가 반대, 근로기준법 상의 여성보호 조항을 양성평등조항으로 전환, 임신중 유급 검진 휴가 및 유급유산 휴가 신설 등을 제시했다. 남녀 평등실현을 위한 정책안으로는 성차별적인 교과과정의 개편, 고용평등실현을 위한 여성근로감독관 확충, 직장 보육시설의 확대와 정부의 지원 확대, 학교급식의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강화 등이었다.

한편 공대위는 유급생리휴가 폐지 반대를 위한 향후 실천계획으로 총리 면담 및 생리휴가 사용 실태 및 존폐에 관한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와 함께 폐지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